1.21 전국승려대회

기독공화국 추진 성시화운동 강화 대통령 교황알현 이게 나라인가!

반복되는 종교편향 역사



이승만 정부
1945~1960

-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
- 원조물자 개신교 우선 배정.
- 신학교의 대학원 인가.
- 공영방송서 선교방송 실시.
- 기독교방송국 · 극동방송국 설립.
- 제1공화국 국가의전 기독교 식으로 진행.
- 교회에서 해사대 군사훈련.
- 육군참모총장 '군대의 기독교화' 추진 약속.
- 불교계 사찰령 폐지 건의 묵살.
- 이승만 불교내분 부추기는 정화유시 발표.
- 기독교계 일요일 선거 반대로 선거일 변경.
- 국가배례를 주목례로 변경.



박정희 정부
1961~1979

- '국회조찬기도회' 개최.
- 대통령 위한 조찬기도회 TV실황 중계.
- 국방장관 · 3군 참모총장 모두 개신교인 충원.
- 전군신자화운동.
- '부대합동세례식' 거행.
- 전국교도소신자화운동.
- 전경신자화운동.
- '불교재산관리법' 제정.
- '사찰관리행정지침' 사찰에 전달.
- 문공부 사찰정화 확인반 설치.
- 내무부 산림 내 암자 일제 단속.



전두환 · 노태우 정부
1980~1992

- 전두환 장군 위한 조찬기도회.
- '80세계복음화 대성회' 정부지원.
- 부처님 오신날 MBC 조용기 목사 선교방송.
- 정권실세들의 기독교 '아세아방송국' 설립 특혜.
- 전두환 정부 김장환 목사에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 극동방송 지방방송국 설립 특혜.
- 신군부 '불교계 정화 수사 계획 수립'.
- 10 · 27법난.
- '전통사찰보존법' 대체 입법.
- 원각사 대웅전에 최루탄 발사 경찰 난입.
- 봉축행사에 백골단 폭력.
- 제등행렬에 최루탄 투척.



김영삼 정부
1993~1997

- 김영삼 정부 새 내각 기독교 편향 인사.
- 대장 10명 중 9명이 크리스찬.
- 예비군소집통지서에 "예수 믿으라" 선교문구.
-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 설치법안 개정.
- 청와대 불상 철거 논란.
- 교육부, 부활절과 겹쳐 검정고시 날짜 변경.
- 총무처장관 국가공무원 시험 평일 실시.
- 육군17사단 불상 태워 유기.
- 이회창 선거운동 생중계한 극동방송.
- 국군 특수전학교 불교 탄압.



김대중 · 노무현 정부
1998~2007

- 정장식 포항시장 시 예산 1% 성시화운동 사용 발언.
- 이명박 서울시장 '수도 서울 봉헌' 등 공직자의 잇딴 성시화운동 참여.
- 한국관광공사 후원 '한국교회순교현장순례' 개발.
- 제주성지순례 프로그램 개발.
- 순천시의회 기독교 특혜 조례제정.
- '한국기독당' 창당.
- 개신교 압박으로 사학법 재개정.
-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를 예수의 부대로".
- 육군 제55사단 편지봉투에 특정교회표시.
- 평택경찰서 유치장내 강제예배.
- 서울지하철 노선도에 특정종교 교리표시.
- 조계사에 공권력 투입.
- 오산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연등행사 불허.



이명박 정부
2008~2012

- 이명박대통령 취임식 엠블럼 기독경 묘사 문양으로 교체.
- 청와대 경호처 차장 "모든 정부부처 복음화가 나의꿈".
- 개신교 국회의원들 '일요일 국가시험 금지 추진' 법 개정 추진.
-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차량 과잉 검문.
- 서울시청 공무원 명함에 십자가와 성경문구 표기.
- 사랑의 교회 편법공사 위해 서울시가 도로위치 변경.
- 개신교계 반대로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중단.
- 이명박 대통령 '이슬람채권법' 무산 후 조찬기도회서 무릎기도.
- 지하철노선도 성경문구 삽입.
- 국토해양부 '경관법' '경관계획 수립지침' 대상에 전통사찰 누락.
- 낙단보 마애불 고의 훼손 의혹.
- 개신교 압박에 역이름 통도사 삭제.
- 기독교계 반대로 팔공산역사문화공원 백지화.



박근혜 정부
2013~2017

- 미래창조과학부 내 기독선교회 설립해 선교 활동 계획
- 전주시 천주교와 개신교 중심의 '6대 종교관광 활성화 사업'.
- 전주시 '승암산'을 치명자산(천주교 순교자가 묻힌 산)으로 명칭 변경.
- 총리 지명자 문창극의 노골적인 종교편향.
- 종교편향 전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 기독교 편향 황교안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임명
- 인천공항 전통 연등 불허하고 크리스마스트리는 허용.
- 한국연구재단 종교연구 분야서 불교 배제.



문재인 정부
2017~현재

-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서 축복미사.
- 대통령 취임 특사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교황청에 파견.
- 해외순방 때마다 성당 방문.
- 전주시 특정종교 성시화 사업 재강행.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3월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 문체부 '케럴 활성화 캠페인'.
-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가톨릭 특혜.
-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행사 명동성당에서 개최.
- 황교안 대표 부처님오신날 사찰 가서 합장 거부.
- 전통문화 보전 전승위한 추가 예산 일부 삭감.
- 정청래 의원 문화재관람료 폐훼 발언.
- 주어사 · 천진암 가톨릭 역사 덮어씌우기.

◆ 미군정 · 이승만 정부(1945~1960)

한국사회에서 종교차별은 광복 이후 미군정(美軍政) 시기(1945~1948)부터 시작됐다. 기독교 국가를 지향했던 미군정은 노골적으로 기독교계 우대정책을 폈다. 일본이 남기고 간 종교 적산(敵産) 대부분을 당시 전체 인구의 0.5% 밖에 되지 않던 개신교에 대부분 불하했고 그 자리에 교회와 학교 등 수백 개의 기독교 시설이 들어섰다.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특혜도 제공했다. 불교계가 수십년 애쓴 끝에 1975년에야 부처님오신날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됐으니 30년의 시간격차가 있었던 것이다. 또 공영방송인 서울방송을 통해 일요일마다 선교방송을 내보내는 등 기독교 우대정책을 펼쳤다.

미군정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국가를 방불케 할 만큼 친기독교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헌법에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한 채 국가배례를 주목례로 바꾸고 제헌의회의 시작과 초대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기도로 시작하는 등 제1공화국의 국가의전을 기독교식으로 치르는 관례를 만들었다.

원조 물자 배분 과정에서 기독교계에 특혜를 줘 교육, 복지 분야에서 기독교계가 단시간에 물적 토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정보와 인적네트워크를 거의 독점하고 있던 기독교계는 외국 민간원조단체들에 의해 지원된 복지기금 수혜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이것은 기독교세를 급성장 시키는 물적 기반이 됐다. 또 형목제도와 군목제도를 실시하고 1954년 한국 최초 민간방송인 기독교방송국과 1956년 극동방송국 설립에 특혜를 줘 선교 인프라의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 기독교방송은 1960년대 초반 이미 대구, 부산, 광주, 전북 등 전국 방송망을 갖추며 수십 년간 종교방송 시장을 독점하고 국민들을 끌어 모았다.

이승만 정권에서 19개 부처 장을 역임한 15명 중 개신교 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7.7%에 달했다. 이승만이 국가 의례와 의식에서 이와 같이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옹호하자 개신교계에서도 적극 호응하여, 1952년 9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실시하는 등 기독교인들 역시 이승만의 후원엔 노골적 지지로 화답했다. 이러한 특혜와 지원으로 기독교계는 빠른 시일 내에 물적 · 인적 자산을 광범위하게 축적했다. 반면 불교계는 정교분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승만의 정화유시에 의해 내분에 휩싸였다. 1955년까지 8차례에 걸쳐 대처승 관련 담화를 발표해 정교분리 헌법을 노골적으로 위배하면서 불교내부 문제에 적극 개입했다. 정화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승만이 불교계를 싸움판으로 만들어 놓은 과정 동안 국가와 종교가 어떻게 관계 맺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한 불교 측 연구성과는 거의 없어 안타까움을 전한다.

◆ 박정희 정부(1961~1979)

개신교국가를 노골적으로 지향했던 이승만 정권 반면 불교에 대해서는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악법들을 활용해 교묘하게 통제했다.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원칙을 위배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체도로 활용했다. 군사정권은 여전히 반공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했고 개신교 교회는 적극적으로 정권의 요구를 수용했다. 80년대까지 진행된 개신교인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더불어 교회의 대형화가 실현되면서 개신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강화됐다.

불교재산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을 제정해 불교재산 관리주체가 불교계가 아니라 정부라고 명시했다. 1968년 사찰을 관광지화 하겠다는 발표하면서도 정작 문화재 예산은 사찰에 배정하지 않아 불교문화재는 황폐함이 더해갔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불교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낮아 쉽게 노출해 도굴되거나 혹은 방치돼 과괴되는 경우가 많았다.

◆ 전두환 · 노태우 정부(1980~1992)

전두환-노태우 정부 때도 박정희 정부의 기독교우대와 불교 탄압은 주춘히 이어지며 정권차원의 길들이기가 시도됐다. 1980년 6월, 신군부는 불교계 정화 수사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는 10 · 27법난의 계기가 됐다. 국보위의 수사지시를 받은 합동수사단은 사회정화계획에 따라 10월 27일 새벽 사찰에 진입, 스님 153명을 연행했다. 스님들은 무자비한 구타 등 고문을 당했고 총무원장과 종회의원 스님들은 사퇴서를 강제로 제출토록 강요받았다. 3일 후에는 3만 2000명의 군 병력이 전국 6000여 개 사찰에 진입, 원로 스님 등 1776명을 연행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의해 10 · 27법난은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신군부 세력이 요구한 전두환 지지표명과 문공부 자율정화 지침을 거부한데서 비롯됐음이 밝혀졌다.

육군 제17사단 전차부대에서는 불상을 태워 야산에 유기했고 1996년 부처님오신날에는 특전사에서 법당 주위에 오물을 뿌린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가조직 내에서만도 정교분리위배행위에 해당하는 크고 작은 훼불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개신교 공직자에 의해 국가시험 요일이 바뀌는 일도 벌어졌다. 부활절 주일과 겹친다며 검정고시 날짜를 변경하는가 하면, 국가공무원 시험 역시 평일에 실시했다. 반대로 부처님오신날에는 수십개의 국가자격시험이 진행되기도 했다.

◆ 김영삼 정부(1993~1997)

서울 강남 충현교회 장로였던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집권하면 청와대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게 하겠다"고 공언하더니 취임 이후 대통령이란 공직을 이용하여 거침없는 기독교 색채를 드러냈다. 스스로 '문민정부' 라 내세우며 출범한 김영삼 정권은 첫 내각 인선에서부터 '지나친 종교 차별이 계속될 것 같다' 는 우려를 낳게 하였다. 장관급 인사 중 기독교인은 7명이었던 데 반하여, 불교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권 초기엔 매주 감장환 목사나 조용기 목사를 불러 청와대 예배를 주관하게 했다. 2년제 무허가 신학대학 대부분이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것도 이때였다. 기독교 집회에 국가예비군이 강제로 동원되고 예비군소집통지서와 사찰에 보내는 공문에 기독교 문구가 삽입돼 물의를 빚었다.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93년 2월, 조직 내에서만도 정교분리위배행위에 해당하는 크고 작은 훼불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개신교 공직자에 의해 국가시험 요일이 바뀌는 일도 벌어졌다. 부활절 주일과 겹친다며 검정고시 날짜를 변경하는가 하면, 국가공무원 시험 역시 평일에 실시했다. 반대로 부처님오신날에는 수십개의 국가자격시험이 진행되기도 했다.

임기 말에는 대통령 자신이 직접 국방부 내 교회에서 공직자들을 대동해 공개적으로 예배를 보는 모습이 TV와 신문을 통해 보도됐다. 김영삼 정부 시기 사회 일반에서도 개신교도들의 공격적인 선교활동과 불교멸해 행위가 급증했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 훼불행위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 1994년에만 해도 30여 건에 달한다.

김영삼 정권은 서울 조계사에 두 차례나 공권력을 투입해 물의를 빚었다.

1994년과 1995년에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전국기관차협의회와 한국통신 노조원들을 강제 연행한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갈등을 이어가며 불편했던 김영삼 정권과 불교 사이의 골을 더 깊게 했다. 경찰력 투입 당일부터 정권 규탄 시위가 펼쳐졌고, 얼마 후 조계사에서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국법회가 개최되며 불자들의 공분을 샀다.

◆ 김대중 · 노무현 정부(1998~2007)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보수 개신교 세력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 한국사회에서 거대세력으로 성장한 보수개신교계는 정권지지를 대가로 얻어내던 기존의 상호 협력적 관계에서 벗어나 권력을 직접 배판하고 나아가 스스로 권력에 참여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했고, 기독교 정당 창당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중요한 사건은 성시화운동 본격화다. 성시화운동은 2004년 정장식 前 포항시장이 시 예산의 1%를 성시화 운동에 사용하겠다고 공헌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지역 기관장과 유지, 목사들의 인적 네트워크인 홀리클럽도 이 시기 전국적으로 생겨났다. 이명박 시장의 서울시 봉헌, 서산 성북구청장의 교동협의회 구성, 조규선 서산시장과 전태홍 목포시장의 성시화 발언, 오현섭 여수시장의 '복음엑스포' 발언이 성시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전국 각지의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정교위배적 사건들을 보면 이미 교회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결합돼 지자체와 교회의 결합이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명박 정부(2008~2012)

이명박 정부 들어 정교분리 위해 행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시기 보수 개신교 정치인들과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공공연하게 '기독교국가화' 를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개신교 인맥은 정치권력의 핵심에 자리 잡게 됐고 정치인들은 교회권력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 '이슬람채권법' 을 추진하다 개신교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직후 열린 국가조찬기도회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 일명 '무릎기도' 인 통성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 물의를 빚었다.

'기독교국가화' 는 전국에서 진행됐다.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기독교유적지를 조성했다. 정부가 만든 교통정보시스템과 교육지리정보서비스 등에 사찰이 빠져 불자들이 반발하면서 2008년에는 범불교 도대회가 열리는 등 불교계의 항의가 지속됐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개신교계는 더욱더 조직적, 체계적으로 공공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 울산 통도사 역 명칭이 삭제, 팔공산역사문화공원이 백지화, 탭플스테이 예산삭감 등 모두 개신교가 불교계를 향해 직접 공격하는 양상은 매우 심화됐다.

막무가내식 택지개발로 인한 수행환경 훼손도 극에 달했다. 신도시 개발과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사전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었다. 이와 함께 공공영역과 공공장소에서의 선교행위는 극성을 부렸고 정부기관 뿐 아니라 대학입시, 교직원 채용 등에서도 종교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늘어나면서 사회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

◆ 박근혜 정부(2013~2017)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때 극심한 개신교 편중 인사와 집회 참여 등으로 종교적 불평등과 갈등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취임 당시 종교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2013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발표한 내각 인사를 보면 개신교 측이 절반이나 됐다.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는 불교와 개신교 측의 입장 차이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취임한 해 8월 국정원 대선 댓글 공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불교계는 이를 규탄하는 시국회의를 열었지만 개신교 측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2014년 6월에는 문창극 총리지명자가 도를 넘는 개신교 찬양발언으로 사회문제가 일었다.

개신교계는 더욱더 조직적, 체계적으로 공공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 울산 통도사 역 명칭이 삭제, 팔공산역사문화공원이 백지화, 탭플스테이 예산삭감 등 모두 개신교가 불교계를 향해 직접 공격하는 양상은 매우 심화됐다.

막무가내식 택지개발로 인한 수행환경 훼손도 극에 달했다. 신도시 개발과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사전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었다. 이와 함께 공공영역과 공공장소에서의 선교행위는 극성을 부렸고 정부기관 뿐 아니라 대학입시, 교직원 채용 등에서도 종교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늘어나면서 사회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

◆ 박근혜 정부(2013~2017)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때 극심한 개신교 편중 인사와 집회 참여 등으로 종교적 불평등과 갈등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취임 당시 종교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2013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발표한 내각 인사를 보면 개신교 측이 절반이나 됐다.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는 불교와 개신교 측의 입장 차이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취임한 해 8월 국정원 대선 댓글 공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불교계는 이를 규탄하는 시국회의를 열었지만 개신교 측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2014년 6월에는 문창극 총리지명자가 도를 넘는 개신교 찬양발언으로 사회문제가 일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면서 미사 참석 장면을 공중파로 생중계하고 교황과의 만남을 '알현(謁見)' 이라고 공식 발표하는 등 개인 종교를 지나치게 강조해 "대통령이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화합을 깨트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2021년 5월 22일 가톨릭교회 위상턴 교구장을 만나 "한국의 가톨릭 신자 비율이 12~13%이며 대부분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등 기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는 발원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트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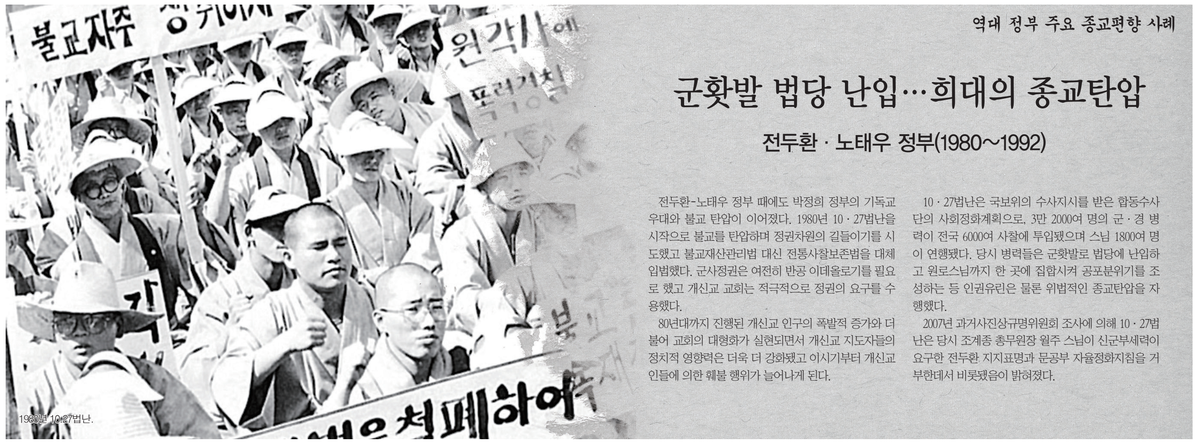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정부부처가 예산을 지원하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 을 펼쳐 불교계의 공분을 샀다. 이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문화재관람료 폐훼발언에 이어 진행된 것이라 불교계의 불편함이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역대 정부 주요 종교편향 사례

군홧발 법당 난입…희대의 종교탄압

전두환 · 노태우 정부(1980~1992)



1980년 10월 7법난.

전두환-노태우 정부 때에도 박정희 정부의 기독교 우대와 불교 탄압이 이어졌다. 1980년 10 · 27법난을 시작으로 불교를 탄압하며 정권차원의 길들이기를 시도했고 불교재산관리법 대신 전통사찰보존법을 대체 입법했다. 군사정권은 여전히 반공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했고 개신교 교회는 적극적으로 정권의 요구를 수용했다.

80년대까지 진행된 개신교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더불어 교회의 대형화가 실현되면서 개신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더 강화됐고 이시기부터 개신교인들에 의한 훼불 행위가 늘어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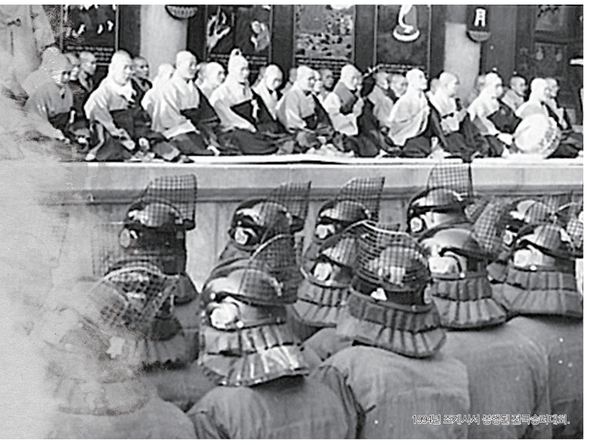
10 · 27법난은 국보위의 수사지시를 받은 합동수사단의 사회정화계획으로, 3만 2000여 명의 군 · 경 병력이 전국 6000여 사찰에 투입됐으며 스님 1800여 명이 연행됐다. 당시 병력들은 군홧발로 법당에 난입하고 원로스님까지 한 곳에 집합시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인권유린은 물론 위법적인 종교탄압을 자행했다.

2007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의해 10 · 27법난은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신군부세력이 요구한 전두환 지지표명과 문공부 자율정화지침을 거부한데서 비롯됐음이 밝혀졌다.

역대 정부 주요 종교편향 사례

"서울을 하나님께" 성시화 운동 본격화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정부(1993~2007)



1993년 조계사서 경찰력 투입 충돌.

서울 강남 충현교회 장로인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집권하면 청와대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게 하겠다"고 공언하더니 취임 이후 대통령이란 공직을 이용하며 거침없이 기독교 색채를 드러냈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 요직에는 기독교계가 대거 기용됐다. 내각 각료 가운데 기독교교수협의회 전총무 J교회 장로 등 개신교 13명, 천주교 4명에 비해 불교는 겨우 2명만이 포함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중요한 사건은 성시화 운동 본격화다. 성시화운동은 2004년 정장식 前 포항시장이 시 예산의 1%를 성시화운동에 사용하겠다고 공헌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포항에 이어 이명박 서울시장은 2004년 '청년 학생 연합기도회' 에 참석,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서' 를 직접 낭독해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끝내 공식적인 사과를 거부했다. 서천교 성북구청장의 교동협의회 구성, 조규선 서산시장과 전태홍 목포시장의 성시화 발언, 오현섭 여수시장의 '복음엑스포' 발언이 성시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전국 각지의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정교위배적 사건들을 보면 이미 교회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결합돼 지자체와 교회의 결합이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